

근대 개항기 부산지역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강 대 민

(경성대학교 사학과)

目 次

I. 머리말

II. 개항기 부산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과잉된 민족주의적 연구방법론 비판
2. 사회구조론적 연구방법론 비판

III. 개항기 부산사 연구를 위한 제언

1. 개방적 민족주의적 연구 방법론의 모색
2. 일국사적 관점의 탈피와 세계사적 관점의 확보

IV. 맺음말

I. 머리말

일본의 함포외교(艦砲外交)와 그 뒤를 이은 강화도조약에 의해 조선은 강제로 개항되었다.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해 조선 정부는, 조선후기 대일교류의 유일한 장소였던 부산초량왜관을 부산일본전관거류지(釜山日本專管居留地)로 개방하였다.

이 전관거류지의 설정이 한국사에 있어서 조계(租界)의 효시¹⁾인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은 1876년 10월 14일 초량공관의 이름으로 관리관 곤도 신조(近藤眞鋤)를 파견하였고, 일본인 자치기관으로 마치다이강(정대관:町代官)을, 이에 소속되었던 상회소(商會所)를 거류지회의소(居留地會議所)로 개편하여 관리관의 지배·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1880년 2월에는 중전의 초량공관(일명 관리관청:管理官廳)을 부산영사관(釜山領事館)으로 개편하여 그들의 영사를 주재시킨 후, 동년 4월 대일본제국부산영사관(大日本帝國釜山領事館)으로 정식화하는 동시에 부산영사관 경찰소를 부설하였으며, 1885년 10월에는 재조선국부산일본재판소(在朝鮮國釜山日本裁判所)를 두어 영사재판을 하였다.²⁾ 특히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 이후 일본은 재일본세력(在日本勢力)의 확대 방법으

1) 강대민, 「개항 이후의 부산과 일본」, 『항도부산』 9,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2. 137쪽 租界나 居留地라는 용어는 대개 같은 것으로 사용되어 中國-韓國은 조계로, 일본은 거류지로 사용하고 한국도 일제침략이 노골화된 1890년대부터는 양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김용욱, 「근대 개항기의 부산행정 -1876~1910년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11,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4. 65쪽

로서 전관거류지를 부산개항장에다 설정하여 거류일본인들에게 영업규칙(營業規則)과 영업종목(營業種目)까지 정하고 치외법권의 시혜 하에서 상권점유(商權占有)까지 누리도록 했다.³⁾

이러한 부산의 개항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110여 편의 글⁴⁾을 통해 논의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개항기 부산사의 연구는 해당시기를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그 실체를 밝혀왔다기보다는 지나친 근대주의적 관점 또는 과잉된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예는 “제국주의 일본 침략의 시발점”이나 “강제된 자본주의의 유입에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자각된 민족의식의 자각”을 통한 “근대적 민족국가의 형성 계기” 등의 용어 선택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자칫 결과주의적 역사인식의 배양과 재생산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물론 개항기의 격변을 제대로 대응치 못함으로써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면과, 개항 그 자체가 일국주의적 폐쇄적 사회에서 국제적 개방적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는 입장도 있다. 또한 해당 시기를 통한 각종 근대적 문물의 유입으로 조선인들의 인식 전환에 변화가 나타났고 이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음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해당 시기에 일본 등의 선진제국(先進諸國)이 제국주의적 침략의도를 지니고 한반도로 진출했을 때, 이에 대한 당대 조선의 대응이 각 계급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각 지역별, 계층별, 업종별 대응이 어떻게 나타났는

3) 강대민, 앞의 글. 137쪽.

4) 해당 편수는 1960년대 이후, 부산학 서지연구목록 및 『항도 부산』, 『역사와 경계』 등에 수록된 논문 및 학위 논문 등을 취합·정리한 바에 기초한 것이다.

지를 파악하고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기의 역사가 한일늑약에 의한 식민지로 귀결되었다는 결과론에 매몰되어 그 시대를 조선의 식민지화의 과정(過程)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이는 당대인들에 대한 역사적 판단 및 평가에 있어서도 민족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포퓰(褒貶)에 그침으로써 해당시기에 대한 실제 파악에도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이상의 역사인식은 개항기 부산사 연구의 방향을 정치·사회사 및 경제사 연구로 편중시키는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110여 편의 논문 중 해당 분야의 논문수가 87편으로 전체 논문의 8할을 차지함으로써 기왕의 연구가 양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역사를 인식함에 있어 반드시 당대의 모든 분야를 살펴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 연구의 비중이 비등해야만 한다고 보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한 시대의 인식에 있어 총체적 인식 없이 특정 분야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이해만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분명 그 시대의 삶을 총괄적으로 인식하는 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경계해야 할 점이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기왕의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음의 방향에서 글을 전개시키고자 한다.

첫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대사(當代史) 서술에 있어

과잉되게 나타나는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좀 더 객관적 관점에서의 개항기 부산사 서술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사회사 및 경제사에 편중되어 있는 근현대사 연구에서 생활사 등을 통하여 개항시기를 지냈던 부산 민중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학적 의미의 개념 유입과 정치한 수치의 계량(計量) 등을 논하는 가운데, 거대담론의 하부 구조 밑에서 질식되어버린 당대인들의 삶을 통한 접근으로써 개항기 부산의 실체를 구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근래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모더니즘 계열과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교류, 민중사학과 뉴 - 라이트 계열의 신자유주의적 사학⁵⁾ 등의 충돌로 혼미한 역사학계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논의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닐지는 모른다. 그러나 상기의 혼돈이 비생산적이고 적대적인 와류(渦流)가 아니라 변증법적 발전을 지향하고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역사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면 본고에서 다루어질 글 역시 의의를 지닐 수 있으리라 본다.

II. 개항기 부산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과잉된 민족주의적 연구방법론 비판

5) 이영훈·박지향·김일영·김철 등이 중심이 되어 펴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전집이 가장 대표적인 도서라 하겠다.

개항기를 비롯한 구한말(舊韓末) 시기는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였다. 이 가운데에서 봉건적 내부모순과 외세로부터의 강제적인 근대이식의 경험이 가져 온 외적 모순의 중첩은 ‘근대화’와 ‘자주화’가 상호보완적 의미에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지향점이 아니라 대립적 개념으로 인식되게 하는 왜곡을 낳았다. 특히 이러한 갈등이 자주적 국민 국가의 성립 과정을 통해 변증법적 통합으로 이어져 자주적 근대화라는 발전적 관념이 탄생되기도 전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로 귀결됨으로써, 당대인들은 외세로부터의 저항과 내적 모순의 극복을 통한 신민(臣民)의 자기각성과 이에 근거한 국민(國民)으로의 전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강제적으로 일본제국의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뒤튼린 역사적 경험은 현재에 있어서도 근대화와 자주화라는 양 개념의 정확한 인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결국 개항기의 역사서술에 있어 과잉된 민족주의의 강조 또는 서구의 경험을 변종적으로 적용한 근대주의의 강조를 낳게 하였다.

우선 개항기 부산사 연구에 한정하여 지어 과잉된 민족주의의 영향을 논해보도록 하자. 이른바 과잉된 민족주의는 신화화(神話化)한 아(我) 또는 민족의 강조를 통해 지속적인 비아(非我)를 창출하고 이를 적대적 외부로 전화시킴으로써 내부 모순을 은폐하는 기반이요, 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지수걸⁶⁾, 도면회⁷⁾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에 기반한 역사서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 인간의 행위를 반국민(민족)적 행위와 애국(애족)적 행위로 양분하고 그 사이의 중간적 행위

6) 지수걸, 「‘민족’과 ‘근대’의 이중주」, 『기억과 역사의 투쟁』, 삼인, 2002.

7) 도면회, 「한국근대사 서술에서의 민족국가문제」,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울러 근대화를 긍정적 개념으로 보고 그때의 근대화를 반드시 자민족에 의해 국민국가를 수립하고 서구·일본과 유사한 사회경제체제를 성취한 상태에 대해서만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도 비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국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사라지고 근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에 대한 억압과 교묘한 착취, 인간소외의 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이 자민족에 의해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갔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게 한다는 점은 특히 고려해 볼 만 한 문제점이다.

이러한 바는 개항기 부산사 서술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김용욱의 근대 개항기 부산행정에 대한 연구는 당대 행정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논문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과잉된 민족주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현가(玄家) 일족에 의한 토지 매매 사건에 대한 서술⁸⁾에서 잘 나타난다.

‘다음으로 서술할 토지사건은 특이한 것인데 곧 종전에는 우리 토지가 일본에게 넘어가는 데 있어, 암매·저당의 형식을 취하면서 이전되었으나, 그것은 우리 국민의 사사로운 소량의 토지가 비밀리에 암거래되었음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다음 사건은 당시의 우리나라 요직(要職) 지도층에 있었던 자가 대량의 토지를 정부로부터 불하받아, 이를 일본인의 수중에 넘긴 사실로서, 이는 공공연한 토지의 매매거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원래 일본 조계의 서쪽 일대는 조선조 때부터 정부 소유의 목장

8) 김용욱, 앞의 글, 50 ~ 51쪽.

…… 1893년 6월 동래부에 거주하던 현학두(玄學斗)가 …… 그 불하를 정부에 청원하였던 바, 당시의 농상공부 대신은 이를 인가하였다. 현학두는 인가장을 첨부하여 동래관찰사에게 지계(地契)를 고부받아 토지개간을 착수하였다. 물론 이 넓은 토지는 외국인에게 사사로이 매매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인가받았었다. …… 당시 법부(法部) 법률기초위원(法律起草委員)이었던 현영운(玄映運 : 學斗의 조카)에게 양도되었다. 현영운은 1896년에 이르러 그가 개간하기로 불하받은 땅이 그 지역 내 동민의 분묘·떨나무의 이익을 해치게 되었으므로, 동민들과 충돌이 생겨 원성을 사게 되었다.

결국 …… 동민들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 그후 이 토지를 다시 홍중섭(洪仲燮)에게 양도하였다. 그래서 홍중섭이 일본인 아비류호조(阿比留護助)라는 자에게 1900년에 공공연하게 그 토지를 양도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학두가 현영운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동민의 분묘·채초권 문제를 해결할 당시의 동래감리가 현명운(玄明運)이었으니, 모두 현성(玄姓)임에 미루어 보아 일련의 의혹이 없지 않다.’

이상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김용욱은 조선과 대한제국을 거치는 구한말 시대의 국호(國號)를 ‘우리나라’라는 시대성이 모호한 용어로 대치하는 한편, 시대적 개념에 맞지 않는 ‘우리 국민’이라는 불확실한 용어로 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경우 그 계급적 실체를 밝히지 않고 ‘우리’라는 말 속에 묻어 버림으로써 지주 계급이자 지배계급들과 이주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와 계약관계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낳았다. 이는 ‘우리’의 대척점(對蹠點)으로 상정이 되는 이주 일본인들의 계급적 구성과 사회적 신분에 대한 분석 역시 ‘일본인’이라는 용어 속에 매몰되게 만들며, 또한 이후 식민지 시대와 연계된 감정적 역사 파악으로 인해, 객관적 대

상으로서의 이주 일본인의 역사상(歷史像)을 해석하는 데에도 장애를 만들고 있다. 특히 김용욱 스스로 문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 사건은 ‘당시의 우리나라 요직(要職) 지도층에 있었던 자가 대량의 토지를 정부로부터 불하받아, 이를 일본인의 수중에 넘긴 사실로서, 이는 공공연한 토지의 매매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적 혹은 탈법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바와 같이 서술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한 자의적(恣意的) 해석의 위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결국 이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의 식민지화라는 이후 사건의 결과에 매몰되어 개항기 당대의 이주 일본인 세력과 이후 침략세력으로서의 일본의 구분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동일한 존재로 취급함으로써 조선 내 이주 일본인 세력이 자국 내의 정치 변동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자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과 저항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기회마저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것이 이주 일본인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때로는 그들과 결탁하고 때로는 그들에 대해 저항을 하며 자신의 이익과 국가적 이익을 통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추구했을 개항기의 동래(東萊)·부산(釜山) 지역민의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모습을 파악할 기회를 함께 차단하게 된 것이다.

과잉된 민족주의의 강조는 필연적으로 ‘전유(專有)와 배제(排除)’를 낳게 되어있다. 이를 통해 상기를 강조하는 이들은 이른바 민족 공동체 내의 모순을 은폐하고 집단으로서의 공동체만을 기호화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민족과 이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민중을 배제시킨다. 그리고 그를 통해 계급적 모순과 함께 민족 내부에서 이루어

지고 있던 내적(內的) 식민지화(植民地化)의 문제도 은폐시킨다. 그들은 민족이란 기호를 전유함으로써 때로는 자신들의 사적(私的) 이익을 위해 일본과 결탁을 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했던 지배계급과 민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의의와 영향력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현시대에 있어 식민지 시대 친일과 성격론이니, 공과론이니 하는 궤변과 그 정점에 서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부정을 전체 집합체로서의 민족이란 이름 속에 감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개항기 부산사 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근현대사 인식에 있어서까지 새로운 인식과 시도를 하기 위해서 과잉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2. 사회구조론적 연구방법론 비판

기왕의 개항기 부산사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당대의 일본세력의 침투와 그에 대한 동래·부산 민중의 저항에 대한 고찰이 구체적인 계급·직업상의 분석이나 일반적 생활상(生活相)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구조적 측면을 통한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의 근저에는 일제 식민사학의 잔재인 정체성론(停滯性論)에 대한 학문적 반박이 존재하고 있는 바였으며 그 대안으로서의 내재적(內在的) 발전론(發展論)에 대한 강조의 필연적 귀결이기도 하다. 사실 한국사의 인식에 있어 내재적 발전론의 의의는 참으로 크다 할 것이다. ‘자본주의

맹아론' 혹은 '자생적 근대화론'이라 불리어지기도 하는 상기의 논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의 역사에 비해 1천년이나 뒤떨어졌다는 식민지사관 가운데 정체성이론을 학문적으로 반박했으며, 둘째, 정체성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한국침략의 정당성을 붕괴시키는 이론이었다. 또한 일제가 한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진출했고, 또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을 분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상의 논점 자체가 거의 사회구조론적 분석에 기반한 거대담론의 권역(圈域)이었기에, 이에 대한 논지의 전개 자체도 거대담론에 기초한 분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가운데 당대인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표현한다든지 계급적 분석에 기반한 거시적(巨視的) 접근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

그 대표적 예로서 표용수⁹⁾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논문은 개항기 부산의 객주(客主) 상인(商人)을 중심으로 개항기를 살펴본 노작(勞作)이다. 그러나 상기의 글에서 이항대립(二項對立)을 이루는 조선의 객주상인과 일본인 상인들의 모습은 집합적 단수(單數)이거나 데이터로 보이는 수치(數値)상 존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우선 표용수가 밝힌 바와 같이 조선의 객주상인들은 시장이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던 시기에 판매와 구매가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였던 상황 하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상인 상호간의 문제를 중개(仲介)를 통하여 해결하였던 중간 상인으로서 출발하였던 존재이다. 그러나 이들이 창고(倉庫) 등을 이

9) 표용수, 「개항기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객주상인의 상업활동」, 『경주사학』 15, 경주사학회, 1996.

용하여 당시에 있어 극심하였던 가격변동을 이용하여 중간이윤을 과도하게 추출하면서 물가를 등귀(騰貴)시키는 주범이 되었고 이로 인해 도고(都賈)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후 18·19세기를 통하여 객주는 단순한 상품 거래의 중개인에 그치지 않고 자기자본을 직접 상업 자본으로 운용하는 도매상으로 발전하였다. 객주층 내부에 있어서도 취급 상품의 전문화로 인하여 물종객주(物種客主)의 출현을 보게 되었고, 또 기능에 있어서도 수집과 분산을 달리하는 부문 간의 분화(分化)까지 나타나고 있었다.¹⁰⁾

즉, 이상의 서술에서 살펴보듯이 객주는 중간이윤의 독점점(獨寡占)을 바탕으로 한 대상인으로 그들의 이익의 원천은 중소상인의 희생을 받침삼아 형성된 것이었으며 그들 내부에서도 분화가 나타남에 따라 그 계급적, 부문적 입장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표용수의 글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구조(流通構造)에 있어 객주가 주체가 되어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그 독점적 지위에 대하여 도전을 했던 일상(日商)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그 세력을 침투(浸透)·침식(侵蝕)했으며 때로는 협력관계를 이루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그의 글이 밝히고자 했던 바가 개항기 부산항에 있어서 객주상인들이 어떠한 상업활동을 수행했는가에 초점이 주어진 점을 상기해보면 본고(本稿)의 요구가 조금은 과하다 할 수 있겠으나, 그 스스로가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인의 경제적 침투에 대해 객주상인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부산항을

10) 표용수, 앞의 글, 241쪽.

중심으로 한 유통구조와 객주 상인의 상업활동 및 상회소(商會所)의 설립 운영을 살펴¹¹⁾봄으로써 이해하기에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당시의 조선의 상품유통구조가 근대적(近代的) 산업자본(產業資本)으로 전환(轉換)하는데 하나의 저해요소¹²⁾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순 관계를 객주상인들이 어떠한 대응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자본주의적 관계로 전환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상인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국제무역(國際貿易)과의 지속적인 교류 속에서 객주 상인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점하였으며 그 대응(對應)이 즉자적(卽自的) 대응으로 그쳤는지, 아니면 당대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본주의적 경영마인드를 추구하는 대자적(對自的) 대응을 추구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것 역시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객주상인이 일본 상인의 침투와 활동에 대해 조직 단결을 통하여 상권수호(商權守護)를 위한 자발적으로 객주조합(客主組合)을 설립하여 침탈된 상권을 회복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객주상인들의 노력은 불평등한 여건 속에서도 대등한 경쟁을 위해 도량형(度量衡)의 부정(不正)을 타파하면서, 부족한 자본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근대적(近代的) 금융기관(金融機關)을 설립하는 등 어느 정도의 자본을 축적하여 대응¹³⁾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객주 상인들 이외의 국내 중소 상인들과의 갈등 및 그 해소를 통한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11) 표용수, 앞의 글, 262쪽.

12) 표용수, 앞의 글, 234쪽.

13) 표용수, 앞의 글, 262쪽.

그 자신이 서술한 바와 같이 객주 상인과 국내 중소 상인의 계급적·경제적 입장은 전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는 1890년 3월 통리아문(統理衙門)에서 인천항의 관허유문권주인(官許有門券主人)의 예에 따라, 부산항 객주 25명에 대한 전관지역(專管地域)을 지정한 「부산항객주영업세장정(釜山港客主營業稅章程)」을 제정하여 시행한 일¹⁴⁾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펴 볼 수 있다.

‘(이 「장정(章程)」의 시행내용인 〈절목(節目)〉에 의거하여,) 부산항(釜山港) 객주상법회사(客主商法會社) 44명의 객주를 25명으로 줄이고 전관지역별읍주인으로 지정한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상(日商)들과 접촉하는 객주 통할(統轄)의 용이화, 일상에 대항하는 경제적 강화, 거래 체제의 단순화, 구문(口文) 징수의 강화로 인한 세액(稅額)의 증가 등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객주 상인이 관권(官權)과 결탁한 목적은 수탁판매(受託販賣) 구문(口文)을 수취하여 상업 이익을 남기는 데 있었다.

어쨌든 객주단체는 …… 그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서는 구전(口錢)의 일부를 분납하여 상품 매매의 독점권(獨占權)을 얻어내려고 기도 …… 객주 상인의 특권화(特權化)는 일본상인 뿐만 아니라 국내 소상공인들도 특정 객주상인에 의한 수세(收稅) 사실에 대해 항의 …… 이러한 객주 상인의 구문(口文) 수취(收取)는 국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발전에도 장애가 되었던 것으로 이중성(二重性)이 엿보인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객주 상인의 개항장에서의 특권 행사는 일상과의 대립을 통한 시장권(市場圈) 방어라는 측면에서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독과점적 시장 형성

14) 표용수, 앞의 글, 247 ~ 248쪽.

에 의한 국내 중소상인의 타격 및 압박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기의 글에서 객주 상인으로 대표되는 조선 상인은 그에 귀속될 뿐 소상공인들의 독자적 성격과 활동, 이윤 추구의 활동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다. 그의 글에 존재하는 것은 객주 상인 내 활동의 다양성일 뿐, 계급적 상황에 따른 상인들의 다층적 요구사항은 희소하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상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는 조선 동래·부산상인의 상(像)을 상징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난 바이기에, 그 뒤에 숨겨진 소상공인들의 이해(利害)와 요구를 밝히고 그것이 일상(日商)이라는 공동의 적대적 상대자와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이른바 조선 동래·부산상인의 진면목을 논하는 초석(礎石)이 될 것이다.

Ⅲ. 개항기 부산사 연구를 위한 제언

1. 개방적 민족주의적 연구 방법론의 모색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개항기 부산사의 서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개방적 민족주의적 사관에 기반한 서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과잉된 민족주의는 개항기 부산사의 구체성을 가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당대 민중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침투세력으로서의 일본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잉된 민족주

의에 대한 고찰과 비판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고찰과 비판의 초점은 ‘과잉된’에 맞추어져야지 ‘민족주의’를 해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민족주의의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은 근대사를 이해함에 있어 ‘민족 대 반민족’, ‘친일 대 항일’, ‘지배 대 저항’이라는 이항대립적(二項對立的) 잣대만으로 그 의미를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¹⁵⁾한다. 이들의 주장에는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를 논증하기 위해 각각의 필자들이 동원한 ‘이론(분석틀)’이나 ‘사실(근거)’들 가운데는 동의하기 어려운 역편향적인 주장이 적지 않다. 예컨대 “식민지에서의 회색지대란 저항과 친일(지배와 저항)이라는 이원론을 거부하는 지대”¹⁶⁾ 인식의 회색지대를 말하는 것은 좋으나 그런 일상공간, 정치공간이 따로 존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민족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것이요, 또 그 부차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변용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근대라는 개념과 어울리면서 그 복잡성은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개항기 이후 한국사에 있어 ‘민족’을 기반으로 한 ‘국민국가’는 실체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역학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역시 현실이었으며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 있어 그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왔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결과적으로 더 이상 민족은 단순한 상상이나 날조의 산물이 아닌 역사적 실체로서의 존재가 된 것이다.

15) 그들은 ‘친일론’과 ‘협력론’, 식민지 ‘근대성론’과 ‘공공성론(公共性論)’, 근대망(권력) =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동의 합의기반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6)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한국의 근대성과 식민주의 비판』, 역사비평사, 2003.

결국 근대 사회에서 광범위한 사회집단을 결집하는 강력한 매개체는 공통의 역사였고, 가장 강력한 집단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은 민족이었다. 그렇기에 전술한 바와 같이 왜곡되고 과잉되어 신화화한 민족주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역사서술의 근거에 이르는 장(場)에 민족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 단계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층 더 발전된 민족주의의 방향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역사서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양정현¹⁷⁾과 고영진의 글¹⁸⁾은 시사적이다. 특히 고영진은 민족(국가)과 근대의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해서 민족과 근대를 해체하자는 입장이나 민족과 근대를 중심으로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 모두를 비판한다.

그는 민족(국가)과 근대(근대성)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민족·근대라는 용어를 최소한으로 정의하여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치중립적(價值中立的)인 개념은 없으므로 최소한의 가치를 부여해 개념 정리를 하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은 이미 역사적 실체이다. 더 불어 민족은 가족·지역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 존재하는 공동체, 즉 경계의 하나이다. 그 경계에 대한 인식이 언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민족은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없어지지 않

17) 양정현, 「포스트모던 역사 이론의 ‘민족’논의와 역사교육」,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2005.

18) 고영진, 「포스트모던시대의 근대 전환기 인식과 근현대사교과서의 역사서술」, 『한국사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민족주의는 지역주의, 가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이다.¹⁹⁾ 즉, 민족주의를 개념지우는 최소한의 조건은 경제와 정체성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스러운 바이며 역사적인 것이기도 하다.

단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과잉된’ 민족주의가 강조되는 가운데 ‘그들이 상정한 민족’을 중심으로 한 ‘전유(專有)와 배제(排除)’의 기준이 특화(特化)되게 되는 것이고, 상기(上記)를 강조하는 이들은 이른바 민족 공동체 내의 모순(矛盾)을 은폐하고 집단으로서의 공동체만을 기호화(記號化)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민족과 이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민중을 배제시키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다.

고영진은 이러한 점을 주목해 민족(국가)이나 근대를 가치 중립적인 개념으로 보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배타적으로 또는 상호 호혜적(互惠的)으로 작용하는가, 그리고 어떤 역사적 조건과 결합해서 가치개념화 되어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시대에 따라 민족(국가)과 근대도 다른 모습을 띠고 나타날 것이며, 역사학자의 일은 그러한 민족(국가)과 근대의 변화 모습을 역사주의에 입각해 밝혀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계의 역사학’이 아니라 ‘관계의

19) 고영진은 민족을 실체로서의 민족이 아닌 인식으로서의 민족, 즉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집단적 정체성의 산물로 이해하고 이 글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지역과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로 보는 입장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상의 공동체’를 근대의 산물로만 보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주장과는 달리 ‘상상의 공동체’가 전근대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전근대 상상의 공동체와 근대 상상의 공동체 사이에는 내용 상 차이가 있다.(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2. 참조)

역사학'20)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주장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국가주의(國家主義)'의 폐해와 그에 조응하면서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배양(培養)·재생산(再生産)해왔던 과잉된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개방적(開放的) 민족주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실제로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운데 권력을 재창출하였던, 한국의 일부 정치권력은 적대적(敵對的) 존재(存在)로서의 일본을 기호화하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맞서는 존재로서의 기호화된 '우리'를 설정함으로써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였다. 더불어 미약한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 그들은 또 다른 절대악(絶對惡)의 존재로서 북한 정권 및 사회·공산주의 세력 - 이른바 '빨갱이'를 상징하고 그들을 축출(逐出)하는 존재로서 자신들을 미화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친일행적(親日行蹟) 및 과오(過誤)를 비판하고 그들의 정치·사회적 권력과 경제적 이윤을 독점하는 현실에 대해 저항하는 민중(民衆)에게 붉은 색 굴레를 뒤집어 씌었다. 이 과정 속에서 민족은 점차 허구화(虛構化)되어가고, 민족주의 역시 민중의 공공적 이익을 담보하는 공동체의 장(場)이 되기 보다는 지배계급의 이익이 관철되는 억압의 장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70 ~ 80년대 시민민주주의의 발전을 거치며 민족주의 역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는 저항 이데올로기로

20) 고영진은 관계의 역사학을 주장하며 그것이 경계를 구분짓기만 하는 '경계의 역사학'이 아니라 경계의 안과 밖, 경계와 경계 사이를 연결하려는 역사학이며, 인간을 중심으로 공간적 관계와 시간적 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역사학이자, 관계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율성, 능동성을 중시하는 바라고 주장한다. (고영진 앞의 글. 참조)

발전하게 되었고, 이것은 민족주의의 본연의 의미를 반영하는 민족주의적 민족주의, 개방적 민족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개항기의 부산사를 서술함에 있어서도 과잉된 민족주의의 억압에 눌려 그 당대의 민중의 삶을 실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역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 민족주의 - 그 이름이 고영진의 주장처럼 ‘관계의 역사학’이 되었건, 양정현의 주장처럼 ‘열린 민족주의’가 되었건 간에 - 를 바탕으로 정치적·사회적 거대 담론 속에 질식되어가던 개별적 민중과 소외자(疏外者)에 대한 논의하고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야 이주 일본인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때로는 그들과 결탁하고 때로는 그들에 대해 저항을 하며 자신의 이익과 국가적 이익을 통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추구했을 개항기의 동래(東萊)·부산(釜山) 지역민의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모습을 파악할 참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 아니겠는가?

2. 일국사적 관점의 탈피와 세계사적 관점의 확보

이제껏 재부(在釜) 동양사와 서양사 연구자들이 한국사, 특히 부산사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산지역의 동·서양사 연구자들이 한국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관(史觀) 또는 연구 방법론의 소개를 통해 인식론적 변화를 불러 오거나 몇몇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한국사와 관련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을 따름이다. 이 결과, 해당 연구자들이 학문과 생활을 영위하는, 주 본거지는 한국 특히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 담론은 부산과 동떨어진 별개의 세계를 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학문의 영역 상, 재부 동·서양사가들이 반드시 부산사를 논해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부산지역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부산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그 단초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양자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렇다면 재부 사학계 내에서 동·서양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의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가 부산사 연구에 관계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서양사와 한국사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괴리감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이제껏 양자는 서로 간의 동질성을 찾는 바보다 연구 방법론과 영역 등에서 각각의 차별성에 더 많이 주목함으로써 각 학문 간의 교류를 주저한 바가 많았다.

특히 일부 한국사 연구자들이 지니는 일종의 우월의식과 이에 의해 비롯된 동·서양가들의 피해의식 등은 서로 간의 공통된 관심사조차 논의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각자 연계의 폭을 좁게 만들었고, 결국 부산사는 부산 지역의 한국사 연구자들이 독점하는 것이요, 그 연구 영역과 연구 방법론도 그들의 연구에 의해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관행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전근대사에 있어 문명의 교류나 전쟁사, 또는 근현대 시기에 벌어졌던 침략과 저항이라는, 불행했던 기억의 반추와 해석이라는 분야 이외에 동·서양사 연구자들이 부산사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오랫동안 부산사 연구는 일국사적 발전 법칙에 기초한 전체적 목적과 사회구조적 연구 틀 속에서 규정되었다. 물론 이 가운데 세계사적 보편법칙론이 논의되기는 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운동 법칙과 인식론적 차원에서 논의되었을 뿐이지 구체적 실례(實例)로서 논의된 바는 드물었다. 흔히 부산의 개항이 한국이 제국주의적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논해지면서도 그 역사를 살펴보는 눈은 일국사적 관점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광옥의 글²¹⁾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해당 논문을 통하여 일본의 관점에서 대(對)조선 - 혹은 대한(對韓) -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류큐(琉球)와의 비교 및 당대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 즉 더 이상 피침략국가(被侵略國家)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침략당사국(侵略當事國)의 관점에서 해당시기를 바라봄으로써 당대사의 인식을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인식을 하던, 못하던 간에 이미 세계화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강력한 추세 중 하나가 되었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세계를 무대로 성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세계 변화가 단순히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는 현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내용적 동태성을 담고 있다. 우선 세계화를 통한 국가간, 사

21) 김광옥, 「근대 개항기 일본의 류큐·조선정책」, 『항도부산』 11,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4.

회간, 문화간, 지역간의 상호교류 증대는 정치적·문화적 경계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개인의 활동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진전은 초국적 자본의 세계적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대한 각국의 지역 자본과의 분쟁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제적 분쟁과 국지적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국가·민족·종교의 장벽을 실감케 하는 역설적 현상을 낳고 있다. 요컨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본질은 상호교류가 늘어남으로써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동시에, 세계 각 지역의 협력과 갈등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호의존성의 심화’에서 찾아야 한다.²²⁾

이렇듯 복잡다단한 세계사와 각 지역사의 연관관계는, 개항기 부산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보편적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부산지역이 지니는 독자적 위치를 재조명하는,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연구는 부산과 유사한 지리적,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을 지닌 여타 지역의 역사를 통해 부산의 동질성과 차별성을 찾아내고, 이에 기반하여 그 역사·문화적 경험과 부산의 그것을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융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하겠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동·서양사 연구자와 한국사 연구자들의 교류 속에서 일국사적인 인식을 벗어난, 세계사의 한 위치를 점하는 부산사의 역사를 고민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22) 강선주, 「세계화 시대의 세계사 교육」,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2005.

IV. 맺음말

이상을 통해 기왕의 개항기 부산사 연구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연구 인식론과 방법론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잉된’ 민족주의, 국가주의화(國家主義化)함으로써 도리어 그 민족 구성원을 억압하고,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반영하여 형해화(形骸化)된 ‘왜곡된’ 민족주의를 부정하고 ‘개방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역사를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했을 때, 개항기 부산사의 역사를 살펴봄에 집체적(集體的) 단수화(單數化)하고 기호화(記號化)한 민족을 탈피하여 사회적·계급적 입장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과 개개인(個個人)의 삶이 살아 숨 쉬는 역사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대적 존재로서의 일본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상기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들의 침투가 제국주의적(帝國主義的) 침략(侵略) 의도(意圖)에 의한 것이라는 단편적이고 물계급적(沒階級的)·물역사적(沒歷史的) 이해를 벗어나 그들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일국사(一國史)에 속박되어 개항기 일본의 정치·경제적 침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지닌 동시에, 그만큼 한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의 최초 접점(接點)으로서의 특성도 동시에 지닌 부산의 독자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기왕의 부산사 인식을 반성하고 상호관련성의 인식 하에서 한국사 연구자 및 동·서양사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를 이룰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세계화 시대의 모든 지역이 지니는 공통된 문제의

식을 부산 지역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동시에 일국사적 인식을 탈피하여 초국적 자본의 시대에서 개별 국가의 지역이 어떻게 스스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더 많은 논의가 해당 분야에 관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개항기에 있어 일본상인이 국내에 유입시켰던 근대물품이 당대의 부산·동래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문화적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당대를 전후하여 부산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던 기독교(基督教)는 그들에게 어떠한 세계를 열어주었는 지 등의 생활·문화사적 연구의 개발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